

주간 통일정세

2016-45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1.5	北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년...세계일류로 키우자(연합뉴스) 北 두만강 감시초소 모두 복구...적외선카메라 설치(연합뉴스)
	11.7	北 '200일 전투' 막바지 다잡기...쾌배주의 없어야(연합뉴스)
	11.8	인도주의 지원 전문가 "북한, 과거에 비해 재난 대응 신속"(미국의소리)
	11.9	北 김정은, 美 대선일 맞춰 軍시찰...“자나깨나 싸움준비”(종합)(연합뉴스) 北, 평양 민속공원 대부분 해체...‘장성택 흔적 지우기’(연합뉴스)
	11.11	김정은, 서해 최전방서 포격훈련 참관...“싸움터지면 한뭉치 하라”(연합뉴스) 北, 포병국장 윤영식 →박정천으로 교체...소장 강등(연합뉴스)
	경제	11.8
11.9		암록강 중류 북중접경 중지안, 대북교역 기반시설 건설 '한창'(연합뉴스) 북한 선적 화물선 적재 능력 소폭 증가...한국의 22분의 1(미국의소리)
사회 문화		11.7
	11.8	북, 장마당 '2부제' 부활(자유아시아방송) 북 과도한 차량단속에 주민 반발(자유아시아방송)
	11.10	北, 북한 주민에 수해지원으로 현금 내라 지시(연합뉴스)
	11.11	北, '620상무' 신설해 함북 주민 불법영상물 대대적 단속(연합뉴스) 북한 내 외국인 지방서 인터넷 사용 가능(연합뉴스)
외교 국방	11.5	북한 지난달 북미 비공식 대화 때 '핵, 안보상 필요' 주장(연합뉴스) 美, 北 자금지택 우려국 세부규칙 확정 공식 발표...北中 동시겨냥(연합뉴스) 北 "日, 총련·재일동포 집요하게 탄압" 주장(연합뉴스) 38노스, 北 공계리 꾸준한 활동...美 대선 앞 도발 가능성은 낮아(연합뉴스) 美 전문가 "북한, 내년 여름 무수단 실전매치 가능"(연합뉴스)
	11.6	北, 美 대선 이틀 앞두고 "미국 붕괴는 숙명" 악담(연합뉴스) 美中갈등에 발목인 북핵제재...4차때의 '57일' 초과 역대최장(연합뉴스) 美 대선 임박...北 무수단미사일 발사 가능성(연합뉴스)
	11.7	북한주재 러 대사, 대북 독자제재는 국제법 위반(연합뉴스)

11.8	국무부 “미 독자제재, 유엔 결의 이행 방편”…러시아 비판 일축(미국의소리)
	中 단둥시장 전격교체…북핵 홍상그룹 수사 관련 가능성(연합뉴스)
	시리아내, 북한군 활동 가능성 또 제기…“알레포서 활동”(연합뉴스)
11.9	北, 中매체 인용 “美대선, 권력가들의 난투극”비난(연합뉴스)
	갈루치 “北 핵보유 희망 부쉬야…비핵화 빠진 북한과 대화 반대”(연합뉴스)
	나자르바예프 카자흐 대통령 “北, 카자흐 핵포기 모델 따르길”(연합뉴스)
11.10	美매체 “北나진항서 스텔스 기능 신형 초계함 포착”(연합뉴스)
	<트럼프 당선> 16년 전 北핵시설 정밀타격 주장…올해 김정은과 햄버거 대화(연합뉴스)
	北 “美 새 행정부, 핵강국 상대해야”…트럼프 향해 ‘견제구’(연합뉴스)
	미국무부 북한 여행정보 3개월 만에 갱신…“여행자제 강력 권고”(연합뉴스)
11.11	北, 화교에 급행 비자 강제…고액 수수료 챙겨(연합뉴스)
	美, 北 핵보유국 인정 공세에 “정책 바뀌지 않아”(연합뉴스)
	영국 외무차관 “BBC 대북방송 최종안 마무리 단계”(미국의소리)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11. 9.

■ 北김정은, 美대선일 맞춰 軍시찰…“자나깨나 싸움준비”(종합)(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344군부대 관하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를 시찰하시였다”고 보도함.
- 김정은은 이 부대가 맡은 전투 임무와 전투 동원 준비실태, 훈련 형태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강도 높은 훈련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밝혔으며, 김정은은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자나 깨나 싸움준비만을 생각하며 훈련을 실속 있게 벌려야(벌여야)한다”며 “전투 임무 수행의 특성에 맞게 훈련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과 함께 훈련에서 주체성, 실용성, 과학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고 통신은 전함.
- 김정은이 이번에 방문한 부대의 구체적인 기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군이 동계 훈련에 돌입한 시점에서 미국 대선과 한국 내 정치 불안 상황 등 대외적 상황을 의식해 내부 독려 성격의 시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2016. 11. 11.

■ 김정은, 서해 최전방서 포격훈련 참관…“싸움터지면 한몫 하리”(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서해 백령도에서 가까운 마합도의 포병부대를 찾아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밝힘.
- 마합도는 황해남도 웅진반도 끝 부분에 있는 섬으로, 백령도에서 18km가량 떨어진 곳이다. 김정은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 최전방까지 와서 포사격 훈련을 참관한 것임.
-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서부전선에 위치한 마합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며 “감시소에 오르시여 방어대의 화력타격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포 배치와 전투동원 준비 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시찰)하시였다”고 밝힘.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11. 11.

■ **北, 포병국장 운영식→박정천으로 교체…소장 강등(연합뉴스)**

- 북한이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물리적 대응’을 위협했던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의 국장을 운영식에서 박정천으로 교체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서해 마합도 방어대 시찰 소식을 전하며 동행자 중 하나로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룡군(육군)소장 박정천’을 언급함.
-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군부 주요 인사들의 계급장을 뗀다 붙이기를 반복하며 ‘계급 길들이기’를 해오고 있음.

다. 공식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11. 5.

■ **北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년…세계일류로 키우자(연합뉴스)**

- 북한 내 최고 대학으로 평가되는 김일성종합대학이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세계일류급 대학’으로 변모하겠다는 계획 아래 다양한 사업에 나섬.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보다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지난 4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그러면서 창조형 인재육성과 첨단과학기술 등을 기본으로 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 교육체계와 교수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함.

■ **北, 두만강 감시초소 모두 복구…적외선카메라 설치(연합뉴스)**

- 북한이 대규모 홍수로 파괴된 두만강 지구 국경경비대 감시초소들을 모두 복구하면서 적외선 카메라까지 새로 설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5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큰물피해로 허물어진 국경경비대 병실(막사)들을 새로 짓고 현대화했다”며 “국경연선(국경지역)에 은폐돼 있던 초소들도 모두 복구하고, 특별한 감시가 필요한 구간들에는 중국산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새로 지은 군인들의 병실과 은폐된 감시초소들은 지하 빛섬유케이블(광케

이블)로 이어졌다”며 “케이블에 연결된 적외선 감시카메라를 통해 이제는 병실에 앉아서도 경비근무에 나간 대원들과 국경을 항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함.

2016. 11. 8.

■ **인도주의 지원 전문가 “북한, 과거에 비해 재난 대응 신속”(미국의소리)**

- 북한 당국의 재난 대응이 빨라졌다고 지난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펼쳐온 전문가는 이는 유엔과 국제 민간단체들과 20여 년 간 협력해온 결과라고 말함.
- 지난 2008년과 2009년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큰 역할을 맡았던 전 월드비전 북한담당 국장, 현재 타이완 기독교장로교단의 부총서기로 일하는 빅터 슈 전 국장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북한 당국자들과 함경북도 홍수 사태를 논의함.
- 그는 또 “북한이 특히 유엔을 통해 국제 지원을 요청한 점이 주목된다”며 과거에는 이런 대응이 미흡했지만, 20여 년 간 유엔과 국제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하며 학습효과가 생겼다고 평가했고, 북한 측이 기독교계의 계속된 지원을 인식하고 있다고 함.

2016. 11. 9.

■ **北, 평양 민속공원 대부분 해체…‘장성택 흔적 지우기’(연합뉴스)**

- 북한이 3년 전 처형된 장성택의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평양 민속공원 시설 대부분을 이미 해체한 것으로 드러났고, 올해 들어 돌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해체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 이미지 서비스인 ‘구글 어스’가 9일 공개한 지난 8월 28일의 위성사진을 보면 공원의 대부분이 파헤쳐져 황토색 흙이 드러나 있으며, 곳곳에 들어서 있던 건물들도 대다수가 철거돼 흔적만 남아있음.
- 다른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은 2013년 12월 장성택을 전격 처형한 뒤 ‘평양 민속공원을 볼 때마다 장성택이 생각난다’며 불편한 심기를 수시로 표출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11. 7.

■ **北, ‘200일 전투’ 막바지 다잡기…패배주의 없어야(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200일 전투의 승리적 결속을 위한 총돌격전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200일 전투가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사설은 “당조직들은 200일 전투의 결승선을 향하여 맹렬히 돌진해 나가는 천만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맡겨진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밝힘.
- 특히 “폐배주의, 보신주의, 무책임성, 남에 대한 의존심, 수입병, 안일 해이와 낙약성과 같은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고, 200일 전투는 지난 6월 1일 시작돼 12월 17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 당국은 최근에는 전투 역량을 함경북도 홍수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음.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11. 8.

- **올해 3분기 북미 교역액, 작년 대비 97% 감소(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과 미국의 최근 교역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수십 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미국 상무부 통계를 인용해 올해 3분기(7~9월) 북미 간 교역액이 약 4만4천 달러(5천여만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7% 감소했고, 방송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북미 간 교역은 전액 미국에서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품목은 주류·음료였고, 북한이

미국으로 수출한 품목은 없었음.

- 특히 지난해 미국의 대북 수출품목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했던 민간기구의 구호·자선지원 물품은 올해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방송은 밝힘.

■ 제재받는 북한도 ‘왕서방’에겐 “기회의 땅”(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8월 북중 교역량이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가 늘어난 것과 관련, 유엔의 대북제재가 중국에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북한은 중국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투자처라는 인식이 큰 것으로 전해짐.
- 특히 단둥과 같이 북한과 접하고 있는 중국 도시의 사업가들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부문에 있어 북한 내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항상 기회를 엿보는 것으로 알려졌고 현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북한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사업가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대북제재와 관련한 어떠한 제재나 규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게다가 현재 북한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의 사업진출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이점과 함께 최근 북한 당국도 그동안 외국 투자자들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신용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어,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도 중국인들의 대북 사업투자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은 밝힘.

■ 러 극동지역 올 상반기 대북교역 25% 급감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올 해 상반기 대북 교역량이 512만 달러(대북 수출 222만 달러, 수입 29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680만 달러)에 비해 25%나 감소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제재 아래서 북한과 교역이 크게 위축된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지적임.
- 이는 8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러시아 극동세관 통관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2016 상반기 러 극동지역 교역동향’ 보고서에 따름 것이고, 북한이 올 상반기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주로 들여간 품목은 수산물(116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절반(52.5%)을 차지함.
- 러시아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당시 예외조항까지 뒤가며 애썼지만 북-러 양국 간 교역의 불씨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고 함.

2016. 11. 9.

■ **압록강 중류 북중접경 中지안, 대북교역 기반시설 건설 '한창'(연합뉴스)**

- 9일 접경지역 소식통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안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인 지난봄부터 북한과 교역을 위한 통상구와 경제합작구, 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속도를 내왔음.
- 지안 도로통상구는 부지 1천391㎡, 건축 면적 1천623㎡ 규모로 길이 50m, 폭 13m, 높이 24m의 5층 건물로 지어지고 있으며 통상구 내에 국경 검문검색실, 여행객 서비스 센터, 관광 및 휴식실 등이 들어설 예정임.
-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지난 3월3일(한국시간) 채택되고 중국이 제재에 참여한 이후에도 합작구 공사는 계속 진행됐고, 접경의 한 소식통은 “지안 도로통상구로부터 1km도 떨어지지 않은 야산에서 고속도로 교각 건설공사가 한창”이라면서 “경기침체에 빠진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 교역을 확대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라고 풀이함.

■ **북한 선적 화물선 적재 능력 소폭 증가...한국의 22분의 1(미국의소리)**

- 유엔 무역개발위원회(UNCTAD)가 최근 갱신한 전세계 해운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북한 선적 화물선의 '선복량'은 모두 76만DWT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2.1%포인트 증가한 수치임.
- 북한 선적 화물선의 선복량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반등한 반면 한국 선적 화물선의 총 선복량은 올해 약 1천6백만 DWT로 북한보다 22배 정도 많음.
- 북한 선적 화물선의 수는 총 232척으로 지난해와 같으며, 이 수치는 지난 2011년 이래 지난해까지 줄어들다 올해를 기점으로 하락세가 멈췄고 한국 선적 화물선의 수는 약 1천900 척으로 북한과 비교해 9배 이상 차이가 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11. 7.

■ **北당국, 떠돌이 주민에 연말까지 거주지 등록 지시(연합뉴스)**

- 북한당국이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주민들을 연말까지 모두 거주 등록 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7일 보도함.

-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은 “10월 초 중앙에서 해안과 산속에 숨어 사는 미거주(거주지 미등록) 주민들을 올해 말까지 모두 거주등록 시킬 것을 지시했다”며 “미거주를 뿌리 뽑기 위해 검거원들이 각 지역에 파견됐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 이 소식통은 “검거원들은 도당, 도보안국, 도 경영위원회, 구역 보안서(경찰서), 구역당 위원회에서 한 명씩 선발돼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며 “미거주 생활에 익숙해진 주민들은 검거원들에게 뇌물까지 고이면서(바치면서) 거주등록을 피하려 한다”고 덧붙임.

2016. 11. 10.

■ **北, 북한 주민에 수해지원으로 현금 내라 지시(연합뉴스)**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북한 당국이) 이달부터 지원품 항목에서 숟가락과 현 옷은 제외하고 대신 현금으로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함.
- 당초 “입고 쓰는 데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된다”며 지원을 독려했던 북한 당국이 방침을 바꾼 것은 ‘수재민을 지원한다면서 사용하던 숟가락까지 거두고 있다’는 한국 언론의 비판 기사 때문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함.
- 한편,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8월 말 수해가 발생하기 전과 후 함경북도 무산군과 회령시의 모습을 비교한 ‘구글 어스’ 위성사진을 이날 보도했고, 홍수 발생 이후인 올해 9월 사진에서는 토사로 휩쓸려 나가 거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VOA는 전함.

나. 시장관련

2016. 11. 8.

■ **북, 장마당 ‘2부제’ 부활(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당국이 전국의 주요 장마당들에서 ‘2부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함.
- 장마당 ‘2부제’는 하나의 매대에서 두 명의 장사꾼이 교대로 장사를 하는 제도인데 김정일 시대에 도입됐다가 김정은 집권 뒤 슬그머니 폐지됐는데, 4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10월 중순경에 선포된 장마당 ‘2부제’가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며 “장마당 ‘2부제’는 2011년 10월에 도입됐으나 이런저런 혼선을 빚다가 두 달 후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자연적으로 사라진 제도”라고 밝힘.
- 김정일 시대에 실패한 장마당 ‘2부제’를 김정은 정권이 다시 꺼내 든 목적은 장사꾼들로부터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서라며 장마당 자리(매대) 하나로 한주에 3일씩 장사꾼

두 사람이 교대로 장사를 하라는 것이 중앙의 요구이고, 매 장사꾼들로부터 받던 자릿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결국 기준에 한 사람당 매주 3천5백 원씩 받던 자릿세를 이제는 두 사람으로부터 받아내 모두 7천원을 거두게 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함.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2016. 11. 11.

■ 北, '620상무' 신설해 함북 주민 불법영상물 대대적 단속(연합뉴스)

- 북한이 국가안전보위부(성) 산하에 조직을 만들어 홍수 피해를 당한 함경북도 주민들을 상대로 불법 영상물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이 방송은 함경북도 소식통 등을 인용, 국가안전보위부(성) 산하에 설치된 단속 조직 '620 상무'가 두만강 접경지역에서 300명 이상의 주민을 불법 영상물 보유죄로 검거했다고 밝힘.
-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이 조직에 적발될 경우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된다고 청진의 대학생 5명이 이달 2일 한국 운동권 가요를 들은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문을 전하기도 함.

라. 사회 동향

2016. 11. 8.

■ 北 과도한 차량단속에 주민 반발(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사법당국이 운전기재(각종 차량)에 대해 법규위반을 핑계로 차량을 마구잡이로 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압수된 차량을 되찾으려 해도 이미 주요 부품이 뜯겨져 빼들려진 상태여서 폐차나 다름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소식통들은 지적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7일 “이달 초 모든 운전기재들은 대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다니라는 당의 방침이 하달되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되었다”면서 “방침에 따라 대낮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또 다른 소식통은 같은 날 “운전수(기사)들이 우리가 언제부터 발전된 나라(선진국)의 추세를 따라왔냐고 반문하고 있다”면서 “도로에 차가 많지 않은 조선에서 대낮에 전조등 단속을 벌이는 것은 당국이 순전히 주민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차량을 몰수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2016. 11. 11.

■ **북한 내 외국인 지방서 인터넷 사용 가능(연합뉴스)**

- 북한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평양 이외 다른 지방에서도 고려링크 서비스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함.
- 익명을 요구한 평양주재 한 외교관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함경북도 청진에서 고려링크 서비스를 이용해 이메일을 보냈다”면서 “북한의 많은 지역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함.
- 고려링크의 USB를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200달러이며, 휴대전화 인터넷 월 이용료는 2GB에 140달러(한화 16만원)로 30달러인 미국의 버라이어즌(Verizon) 통신 서비스보다 무려 5배나 비싼 것으로 알려짐.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11. 5.

■ **북한 지난달 북미 비공식 대화 때 ‘핵, 안보상 필요’ 주장(연합뉴스)**

- 한성렬 외무성 부상 등 북한 당국자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미국 측과의 비공식 대화 때 안보상의 이유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참석자를 인용해 5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 측 인사가 핵 포기를 명기한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을 따르라고 하자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가 밝힘.
- 북한 측은 미국이 원자력항공모함과 B-52 전략폭격기를 한국에 파견한 것이나 한미 연합훈련 등을 거론하며 “안전보장상 우려 때문에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美, 北자금세탁우려국 세부규칙 확정 공식 발효…北中 동시겨냥(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북한의 국제금융망 차단을 위한 조치를 본격화하고 나섬.
-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CEN)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하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힘.

-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지난 2월 18일 발효된 첫 대북제재법(HR.757)에 따라 애국법 제311조에 근거해 지정한 것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음.

2016. 11. 6.

■ 北, 美대선 이틀 앞두고 “미국 붕괴는 숙명” 악담(연합뉴스)

- 북한은 미국의 대선을 이틀 앞둔 6일 “미국의 붕괴는 역사의 숙명”이라고 주장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원고지 67매 분량의 백서를 통해 “역사는 대결과 전쟁에는 전도(앞길)가 없으며, 국민이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정치마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며 이같이 말함.
- 백서는 아울러 오바마 집권 후 미국에서 총기류 범죄가 급증했다면서 오바마 집권 기간 미국이 세계 최대의 반인권 범죄국으로 전락되었다고 역시 주장을 함.

2016. 11. 8.

■ 국무부 “미 독자제재, 유엔 결의 이행 방편”...러시아 비판 일축(미국의소리)

- 애나 리치-앨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러시아 외교 관리가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를 비판한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임.
- 리치-앨런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난 3월16일 발동된 대통령 행정명령을 독자제재의 근거로 제시했고, 행정명령이 2270호에 명시된 특정 의무와 미국의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조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재를 북한에 가한다는 설명임.
- 리치-앨런 대변인은 이런 조치들은 미국의 기존 제재에 더해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 의무 위반을 비롯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며 폭압적인 행동과 정책을 겨냥할 추가 수단을 제공한다고 말했고, 또 이는 북한에 지속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미국의 오랜 의지와 일치한다고 말함.

2016. 11. 9.

■ 北, 中매체 인용 “美대선, 권력가들의 난투극”비난(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지면에 '미국 대통령 선거는 권력가들의 난투극(난투극)'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중앙인민방송의 비평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음.
- 신문은 “중국중앙인민방송이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는 대통령 선거를 권력가들의 난투

- 극으로 비평하였다”며 “(이 방송이) 국가정책이 특권계층의 이익(이익)만을 대변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무력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현실이라고 했다”고 밝힘.
- 신문은 “미국의 정치체제는 더이상 미국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의 합법칙적 위기에 빠져들었다”는 이 방송의 평가도 소개했으며, 북한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도 지난 6일 중국중앙인민방송의 동일한 비평 내용을 보도한 바 있음.

■ 갈루치 “北 핵보유 희망 부셔야··비핵화 빠진 북한과 대화 반대”(연합뉴스)

-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 협상은 북한의 핵무기를 정당화해주는 만큼, 그런 북한과의 협상에는 반대한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가 주장함.
- 갈루치 전 특사는 8일(현지시간) 미국 정책연구기관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 희망을 부셔야 한다. 다시 말해 핵동결이 비핵화로 가는 한 단계가 아니라면 (단지 대화를 위한) 핵동결에 합의해선 안 된다”고 강조함.
- 하지만 그는 “김정은이 (핵) 억지력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핵무기 능력을 더 과신할지 모른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했으며,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와 관련, 그는 “그들은 '인권 행태 개선'이라는 문구가 김정은 체제의 종말을 뜻하는 코드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함.

2016. 11. 10.

■ <트럼프 당선> 16년 전 北핵시설 정밀타격 주장··올해 김정은과 햄버거 대화(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8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해 제45대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증되고 트럼프 당선인이 16년 전 북한 핵 원자로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 필요성을 제기한적 있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더욱 주목됨.
- 트럼프는 2000년 개혁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펴낸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The America We Deserve)에서 북한의 원자로를 정밀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 핵문제를 거론하며 “문제를 지적하는 건 쉽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내가 원자로를 폭격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묻고는 “완전히 맞다(You're damned right)”고 밝힘.
- 트럼프는 “나는 핵전쟁(thermonuclear war)을 원하지 않지만, 협상이 실패할 경우 북한이 실질적 위협을 주기 전에 이 같은 무법자들을 겨냥한 정밀타격을 지지한다”면

서 “북한의 핵협박과 미국 인구의 파괴를 막을 수 있다면 대통령으로서 재래식 무기를 이용해 북한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명령을 내릴 준비가 돼 있다”며 거듭 강조함.

■ **北 “美 새 행정부, 핵강국 상대해야”…트럼프 향해 ‘견제구’(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다음 날인 10일 ‘미국의 대조선 제재 압살 책동은 파산을 면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기명 논평에서 이같이 밝힘.
- 논평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래년도(내년도)에 집권할 새 행정부에 주체의 핵강국과 대상(상대)해야 할 더 어려운 부담을 들썩워 놓은 것뿐”이라고 주장함.
- 또 미국 대통령들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대로 자신보다 무거운 짐을 후임자에게 물려줬다며 “눈덩이처럼 커져온 그 부담이 이제는 미국의 생사존망과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후임자는 더 큰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고도 말함.

■ **美 국무부 북한 여행경보 3개월 만에 갱신…“여행자제 강력 권고”(연합뉴스)**

-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여행경보에서 북한에서는 “미국에서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행동으로도 사법당국에 체포돼 장기간 구금되고 과도하게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북한으로의 모든 여행을 피하라고 강력히 촉구함.
- 미국 정부는 올해 들어 지난 5월과 8월에도 같은 내용의 여행경보를 발령함.
- 국무부는 지난 2월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북한 여행경보를 3개월마다 갱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2016. 11. 11.

■ **美, 北 핵보유국 인정 공세에 “정책 바뀌지 않아”(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함.
- 애나 리치 앨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에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고, “북한의 지도부는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안보, 번영을 이룰 것인지, 지금과 같은 길에 머물러 외교 고립과 자신들이 초래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이 방송은 전함.
- 이는 북한이 지난 8일(현지시간) 당선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를 겨냥해 핵보유국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박으로 보임.

나. 북·중 관계

2016. 11. 8.

■ 中 단둥시장 전격교체…북핵 홍상그룹 수사 관련 가능성(연합뉴스)

- 북중교역 거점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의 시장이 1년 10개월 만에 교체돼 주목되고 있으며, 중국 관영 인민망(人民網)은 단둥시 당위원회가 시정부 간부대회를 열어 스젠(石堅·51) 단둥시장을 랴오닝성 관광발전위원회 당 조직 서기로 승진 임명한다는 랴오닝성 당위원회 결정을 전했다고 8일 보도함.

일각에서는 단둥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랴오닝 홍상(鴻祥)그룹이 북한의 핵 개발 연계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그와 관련해 단둥시 관료 수십 명이 이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이 스 시장의 거취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음.

- 북·중 접경 한 관측통은 “지난 9월 초 마샤오홍(馬曉紅) 홍상그룹 대표가 북한과의 불법거래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중국 관료 수십명이 연루됐다고 자백했고 스 전 시장은 작년 10월 제4회 북중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북중 변경주민들이 관세없이 국경무역을 할 수 있는 호시(互市)무역구 개장을 이끄는 등 북중교역 활성화에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음.

2016. 11. 10.

■ 北, 화교에 급행 비자 강제…고액 수수료 책거(연합뉴스)

- 함경북도에 거주하는 한 화교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출국비자 신청을 받으면서 급행처리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엄청난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고 RFA에 밝힘.
- 이 소식통은 “이전에는 200위안(약 3만4천원) 정도의 수수료에 약간의 뇌물만 고이면 (비치면) 빠르면 보름, 늦어도 한 달 이내에 출국비자가 발급됐다”면서 “이제는 급행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비자가 언제 나올지 기약할 수 없다”고 말함.
- 그는 “비자신청을 받는 시(市) 보위부 담당자가 '급행처리 수수료'라며 300달러(약 35만원)를 요구했다”며 “내가 낸 비자수수료에는 (보위부) 담당자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다. 북·일 관계

2016. 11. 5.

■ 北 “日, 총련·재일동포 집요하게 탄압” 주장(연합뉴스)

- 북한의 잇단 핵실험을 이유로 일본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 재일동포를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북한의 해외지원단체가 주장함.
-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동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솟은 우리 공화국의 권위와 위상에 질겁한 일본 당국과 우익 반동세력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 더욱 미친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5일 보도함.
- 담화는 “명백히 하건대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강화조치는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며 “그것이 곧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의 구실로 될 수 없다”고 밝힘.

라. 북·러 관계

2016. 11. 7.

■ 북한주재 러 대사, 대북 독자제재는 국제법 위반(연합뉴스)

-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국가별 대북 독자제재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7일 RFA는 마체고라 대사가 최근 북한의 주요 언론 매체와 회견한 자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만이 강제조치인 제재를 취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힌 내용이 러시아 대사관 공식 페이스북에 실렸다고 밝힘.
- RFA는 “러시아 고위 외교관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의 추가제재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며 “이는 안보리 차원의 추가제재와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고려 중인 한·미·일 3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11. 6.

■ 美中갈등에 발뚨인 북핵제재...4차때의 '57일' 초과 역대최장(연합뉴스)

-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제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6일부로 4차 핵실험 때의 '57일'을 넘어섰음.
- 지난 9월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6일까지 58일이 경과했지만 아직

- 안보리 제재 결의는 채택되지 않았음. 지난 1월 6일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만인 3월 3일(한국시간) 결의 2270호가 채택됐던 것에 비해 지연되는 상황임.
- 외교 소식통은 5일 “미중간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미중간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또 다른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의 추가 조율이 필요하기에 결의 채택까지는 적어도 1~2주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음. 미중 양국이 현지시간 8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결의의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2016. 11. 8.

■ **시리아內, 북한군 활동 가능성 또 제기…“알레포서 활동”(연합뉴스)**

- 시리아 내전에 북한군이 참전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시리아 반군 측에 의해 또다시 제기됐고,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매체 'NK뉴스'는 7일(현지시간) 시리아 반군 측 매체의 지난 2일 기사를 인용, 알레포에서 반군 단체에 붙잡힌 정부군이 북한인 군사 고문의 존재를 시사하는 증언을 했다고 보도함.
- NK뉴스가 인용한 웹사이트 '엘 도라르'는 반군단체인 '자바트 파테알샴(알누스라 전선의 후신)'이 붙잡았다고 주장하는 정부군 포로의 증언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고, 시리아와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인 북한이 시리아 내전에 참여해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됐음.
- 러시아 타스 통신의 올해 3월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의 반정부 대표단인 고위협상위원회(HNC)의 수장 아사드 알주비는 내전 실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2개 부대가 시리아에 있다”고 밝혔지만, 매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적대 세력들이 퍼뜨리는 헛소문”이라며 해당 보도를 부인함.

2016. 11. 9.

■ **나자르바예프 카자흐 대통령 “北, 카자흐 핵포기 모델 따르길”(연합뉴스)**

- “핵 개발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카자흐스탄이 실천한 비핵화 모델을 따르길 제안합니다.”
- 9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방문하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연합뉴스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서방의 지원을 통한 경제 개발에 성공한 모범적 비핵화 모델을 만든 지도자로서 핵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에 해주고 싶은 조언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권고함.

- 독립 카자흐스탄을 25년 동안 통치해온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내내 비핵화 운동에 앞장서 중앙아시아 비핵지대화 설립을 주도해 왔으며, 북한의 핵 개발 정책에 대해선 강한 비판을 계속해옴.

2016. 11. 11.

■ 영국 외무차관 “BBC 대북방송 최종안 마무리 단계”(미국의소리)

- 영국의 알록 샤르마 외무부 차관은 9일 영국 의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외무부가 ‘BBC’와 대북방송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샤르마 차관은 이어 외무부는 정확하고 양질의 공정한 뉴스를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 나라 등 국제 청취자들에게 전달하는 ‘BBC’의 사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고, 영국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의회와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BBC’의 대북방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됨.
- 하지만 ‘BBC’는 북한에서 주민들이 라디오를 듣기 어려운 현실과 북한 당국의 엄격한 통제, 전파 방해 등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보였지만, 지난 2013년 대북방송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특히 지난해 1월에 발표한 ‘뉴스의 미래’ 보고서에서, 북한에 효과적인 방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임.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11. 5.

■ 38노스, 北풍계리 꾸준한 활동…美대선 앞 도발 가능성은 낮아(연합뉴스)

- 북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앞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왔음.
-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는 4일(현지시간)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로켓발사장의 위성 사진 분석을 토대로 미국 대선 전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다'(Unlikely)고 예상함.
-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지난달 5차 핵실험이 이뤄진 북쪽 갭도 입구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관측되지만, 이것이 지난 실험 후 자료를 수집하거나 입구를 폐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실험 준비인지 그 목적은 불확실하다고 설명함.

■ 美전문가 “북한, 내년 여름 무수단 실전배치 가능”(연합뉴스)

- 북한이 내년 여름이면 무수단(북한명 화성-10호) 중거리 미사일의 실전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음.
- 미국 항공우주연구기관인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적어도 중거리 미사일에 관한 기본 기술은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무수단 여섯 번째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을 보면 미사일 설계와 운용의 신뢰도 측면에서 상호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힘.
- 실링 연구원은 “성공적으로 설계됐다면, 계속 발사 시험을 거듭하다 보면 결국엔 제대로 된 미사일을 갖게 돼 있다”며 “북한이 지난 6월 시험발사 때 무수단을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발사한 만큼 1년 뒤엔 처음으로 실전 운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함.

2016. 11. 6.

■ **美 대선 임박...北 무수단미사일 발사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전후로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북한식 명칭 화성-10) 시험발사를 포함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군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군 관계자는 6일 “북한이 언제라도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동원해 북한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도 지난 4일(현지시간) 상업용 위성사진을 근거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꾸준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분석함.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도 당장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평가됨.

2016. 11. 9.

■ **美매체 “北나진항서 스텔스 기능 신형 초계함 포착”(연합뉴스)**

- 북한 나진항에서 스텔스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신형 초계함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매체 'NK뉴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함.
- NK뉴스에 따르면 포착된 함정은 길이 77m의 중무장 초계함으로,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도록 레이더 반사면적(RCS) 감소 기능을 갖췄으며 함정은 대형 구경의 함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함.
- NK뉴스는 “이는 북한이 (한·미) 양국을 위협하는 해군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폭넓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고, 다만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

스 올소스 애널리시스 연구원은 “(해당) 초계함이 현대화된 대함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경우에만 그 위협이 실질적일 것”이라고 NK뉴스에 전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1.6	정부, 美대선 이후에도 강력한 한미동맹 공감대(연합뉴스)		
	11.8		주한 美8군사령관 “한반도통일 준비돼 있다”...‘北안정화’ 거론(연합뉴스)	
			한·미·영 3국, 첫 공군 연합훈련...‘타이퐁’ 공개(연합뉴스)	
		육군, 北내륙에 헬기로 특수부대 침투...한미 공중강습훈련(연합뉴스)	미국방부 “사드, 가능한 한 빨리 한국 배치”(연합뉴스)	
	11.9	윤병세, 美 차기정부도 대북압박·한미동맹 중시 기조 지속(연합뉴스)		
	11.10	외교부, 트럼프 측에 고위급 파견해 대북공조 필요성 설명 방침(연합뉴스)		
		정부, 美인수위 단계부터 대북 압박기조 유지 위해 협의할 것(연합뉴스)	트럼프 “한국방어 굳건히 유지...한국 안전 끝까지 함께할 것”(연합뉴스)	
		김영우 국방위원장 “방위비분담금 당장 가시화될 수 있는 문제”(연합뉴스)		
			브룩스 연합사령관 “한미 동맹, 갑작스러운 변화 예상치 않아”(연합뉴스)	
	11.11	국방부, 美대선 평가회의 개최...사드 배치 등 정상 추진(연합뉴스)		
11.11		美백악관 “역대 대통령, 정당 상관없이 한미동맹 강화”(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1.7		中, 한중 국방교류 중단 가능성에 “사드 반대 입장 명확”(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1.6		日 외무상,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 개최 책임 다할 것(연합뉴스)	

	11.8	한·일, 내일 서울서 군사정보협정 2차 협의...타결 임박한 듯(연합뉴스)	
	11.9	한미일, 北미사일 해상 탐지·추적훈련...4개월 만에 두번째(연합뉴스)	
	11.10	한·일 관세당국, 불법·부정무역 단속에 협력키로(연합뉴스)	日관방 “독도 문제, 예산 편성에서도 배려할 것”(연합뉴스)
	11.11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음주 가 서명...‘속전속결’논란(연합뉴스)	자민당의원, 위안부 결의안 주도 혼다 의원 낙선에 “낭보다” 환호(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1.9		<트럼프 당선> 중국 외교부, 美 차기 정부와 안정 관계 지속 기대(연합뉴스)
	11.11		中상무부, 트럼프 당선에 미·중 경제무역 변하지 않을것(연합뉴스) 中매체 “트럼프 힘없는 대통령 될것” 견제구(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1.9		<트럼프 당선> 아베 축사 발표...“미·일은 흔들림 없는 동맹국”(연합뉴스)
	11.10	주일美사령관, 앞으로도 미일 동맹 강조...주일미군 역할 충실(연합뉴스)	日아베, 발 빠른 행보...트럼프와 통화 이달 17일 뉴욕서 회담(연합뉴스)
	11.11		日여야 한목소리 트럼프 견제...日, 미군 주둔비 충분히 부담중(연합뉴스) 아베, 트럼프에 즉석제안 “뉴욕서 17일 시간되는데”...“나도 OK”(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1.11		러, 트럼프·푸틴 외교정책 유사...당선 전부터 접촉 논란(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1.7		日외무성, 미쓰비시머티리얼에 강제노동 中피해자와 화해권고(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11.8	러中 총리회담서 경제협력 등 중점논의...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연합뉴스)	
	11.9	리커창·푸틴 회동...사드 한반도 배치반대 등 美견제 논의한 듯(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11.8	아베·푸틴, 내달 日 야마구치 이어 도쿄서도 회담한다(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11. 6.

■ 정부, 美대선 이후에도 강력한 한미동맹 공감대(연합뉴스)

- 정부는 6일 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최근 “강력한 동맹의 특징은 다른 인물들이 그 나라들을 이끌 때조차도 영속적이라는 점”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발언으로 평가함.
- 외교부는 이날 “어니스트 대변인 발언은 양국 국내정세에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대변인은 (발언 당시)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밝힘.
- 외교부는 이어 “미국도 금년 대선 이후 곧 행정부 교체기에 접어들지만, 한미 양국 간에는 행정부 교체 이후에도 강력한 한미동맹이 지속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함.

2016. 11. 8.

■ 주한 美8군사령관 “한반도통일 준비돼있다”…‘北안정화’ 거론(연합뉴스)

-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육군 중장)은 8일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통일할 준비태세를 갖췄다며 한미 연합훈련으로 동맹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밴달 사령관은 서울사이버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한미동맹 강화’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지금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북한 김정은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최종적으로는 한반도를 통일할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밝힘.
- 그는 “한미동맹의 준비태세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미동맹을 위해 복무하는 장병들의 삶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함.

■ 한·미·영 3국, 첫 공군 연합훈련…‘타이푼’공개(연합뉴스)

- 한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진행 중인 한·미·영 3국 공군이 8일 영국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비롯해 이번 연합훈련인 ‘무적의 방패 (Invincible Shield)’에 투입된 항공기들을 공개하며,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훈련의 목적은 한·미·영 3국 공군의 연합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안보와 군사 부문에서 영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한·미·영 3국 공군은 지난 4일부터 한국에서 첫 연합훈련을 진행 중이고, 오는 1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훈련에서 3국 공군은 가상의 적 군사시설과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는 훈련과 함께 대량으로 공격해오는 적 항공기를 공중 요격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진행 중임.
-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14일 영국 공군이 한국, 미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영국은 침략적인 군사연습 참가를 당장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함.

■ 육군, 北내륙에 헬기로 특수부대 침투…한미 공중강습훈련(연합뉴스)

- 육군은 보도 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남한강과 강원 홍천 일대에서 한미 군의 헬기를 투입해 연합 공중강습훈련을 한다”고 밝힘.
- 공중강습작전은 유사시 항공기로 적 후방 지역에 특수부대를 포함한 지상 병력을 침투시키는 것으로, 지휘부와 핵심시설을 파괴하거나 거점을 점령함으로써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지상전의 승리를 끌어내는 중요한 작전임.
- 주한미군도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육·해·공군의 협동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유사시 적진 어디라도 침투해 반드시 전투를 승리로 종결하겠다”고 다짐함.

■ 미국방부 “사드, 가능한 한 빨리 한국 배치”(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 방침을 거듭 밝혔으며,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관련 질문에 “이는 우리가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는 사안”이라면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길 원한다”고 함.
- 또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구체적인 사드 배치 시기를 언급한 것으로 있는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브룩스 사령관은 앞서 지난 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육군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 연설을 통해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심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면서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힘.
- 쿡 대변인은 “앞으로 배치될 사드 시스템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방어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수많은 방어 조치들의 일부로써 한국 방어를 돕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함.

2016. 11. 9.

■ **한미일, 北미사일 해상 탐지·추적훈련…4개월 만에 두번째(연합뉴스)**

- 해군은 9일 “한미 양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늘부터 10일까지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미사일 경보훈련을 한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3국의 미사일 탐지·추적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함, 미 해군의 스테덤함,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카이함 등 3국 이지스구축함들이 투입되며 한국과 일본 이지스함들이 수집한 정보는 하와이에 있는 연동통제소를 거쳐 공유된다고 함.
- 일각에서는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훈련은 3국 미사일방어체계(MD)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MD 체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

■ **윤병세, 美 차기정부도 대북압박·한미동맹 중시 기조 지속(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대북 압박을 중시하는 대북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함.
-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회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보고함.
- 윤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함께 언급하면서 “트럼프 후보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핵 문제라고 밝혔고, 클린턴 후보 역시 북한 핵실험 이후 규탄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 위협을 미국에 대한 직접 위협이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함.

2016. 11. 10.

■ **트럼프 “한국방어 굳건히 유지…한국안전 끝까지 함께할 것”(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 및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외교당국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과 오전 10시께부터 10여 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

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흔들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언급은 한-미동맹 기반의 양국관계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되어 주목을 받게 됨.

■ 외교부, 트럼프 측에 고위급 파견해 대북공조 필요성 설명 방침(연합뉴스)

- 외교부는 트럼프의 당선이 결정된 9일 밤늦게까지 윤병세 장관 주재로 TF 회의를 열어 트럼프 집권이 한국 외교에 미칠 영향, 트럼프 진영과의 채널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10일 전함.
- 외교부는 당초 김형진 차관보 중심으로 TF를 준비해왔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진 점 등 상황의 엄중성을 감안해 윤병세 장관 주도 아래 TF를 가동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 또 외교부는 트럼프 진영과의 대북정책 등 조율을 위해 임성남 제1차관 또는 차관급의 다른 고위 간부를 워싱턴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을 상대로 북핵 위협이 고조된 한반도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긴밀한 공조 속에 추진해온 대북 제재와 압박의 지속 필요성 등을 강조할 방침임.

■ 정부, 美인수위 단계부터 대북 압박기조 유지 위해 협의할 것(연합뉴스)

- 정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선거 당선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이전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현재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으로써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인수위 및 외교·안보팀 구성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촉구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함.
- 조 대변인은 이어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신 행정부와 협력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한다”며 “한-미동맹, 북핵 문제, 통상·경제 협력 등에 대한 긴밀한 정책 협의와 함께 대비 공공외교 강화 등 조치들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임.

■ 김영우 국방위원장 “방위비분담금 당장 가시화될 수 있는 문제”(연합뉴스)

-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미국 대선이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대화를 했다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당장 가시화될 수 있는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힘.
-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방위비 분담금 내용을 이해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며, 신행정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위원장이 전함.
- 김 위원장은 “(한미동맹의) 내막을 잘 아는 지한과가 있으니 국방부도 적극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한국(주한미군)을 거쳐 간 장성, 사령관 등을 총동원해 트럼프 라인에 인맥을 구축하겠다는 게 국방부와 군의 입장”이라고 전함.

■ 브룩스 연합사령관 “한미 동맹, 갑작스러운 변화 예상치 않아”(연합뉴스)

-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10일 한미 동맹·안보와 관련 “갑작스러운 변화는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밝힘.
-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28차 한미재계회의에서 “우리는 마지막 명령을 따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회의 참석자가 전함.
- 다만, 브룩스 사령관은 안보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전혀 배제(rule out)하지는 않는다며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와 관계없이 항상 새로운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함.

■ 국방부, 美대선 평가회의 개최…사드 배치 등 정상 추진(연합뉴스)

- 국방부는 미국 대선 다음 날인 10일 이번 대선 결과를 평가하는 회의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국방 분야 대책 마련에 착수함.
- 국방부는 “오늘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국방부 실장들이 참석하는 ‘미 대선 결과 관련 상황평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어제 실시된 미 대선 결과가 우리 국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방 분야의 전반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함.
- 국방부는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협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기존 한미 합의사항은 미국 측과 공조 하에 정상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2016. 11. 11.

■ **美백악관 “역대 대통령, 정당 상관없이 한미동맹 강화”(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공화당 출신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강화한 오랜 전통에 따라 동맹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함.
- 그는 특히 한미동맹을 예로 들며 “민주당과 공화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전통이 있다”며 “한미동맹은 대통령이 누구든, 어느 정당 출신이든 상관없이 굳건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대 민주·공화 양당 출신의 여러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를 추구해 왔다는 사실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함.
- 어니스트 대변인은 “만약 한미동맹의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근거를 찾는다면, 이러한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의 오랜 역사를 보면 된다”고 덧붙임.

나. 한·중 관계

2016. 11. 7.

■ **中, 한중 국방교류 중단 가능성에 “사드반대 입장 명확”(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간 고위급 국방대화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게 대해 중국 국방부는 7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대 입장은 명확하다”고 밝힘.
- 중국 국방부는 이날 저녁 홈페이지에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한중 국방교류와 관련된 입장을 개진함.
- 중국 국방부는 “중국은 중한 양국군의 관계를 중시하며 상호 안보이익 존중이라는 토대에서 한국과 국방분야 교류와 협력을 벌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다. 한·일 관계

2016. 11. 6.

■ **日 외무상,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 개최 책임 다할 것(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연내 자국에서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일중 3개국 정상회의에 대해 “일본에서 개최해 의장국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6일 말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고베(神戸)시에서 행한 강연에서 한일중 정상 회의가 “각각의 국익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안정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함.
- 그는 최근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방일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지적을 염두에 둔 듯 “한국 국내가 혼란스럽다고 전해지고 있다”며 “3개국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2016. 11. 8.

■ 한·일, 내일 서울서 군사정보협정 2차 협의…타결 임박한 듯(연합뉴스)

- 국방부는 8일 “한일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내일 서울에서 GSOMIA 2차 실무협의를 한다”며 “1차 협의에 이어 협정 문안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정부는 지난달 27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실무협의를 착수한 상태이며, 한일이 GSOMIA를 체결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잠수함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일 양국은 실무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올해 안으로 GSOMIA를 체결한다는 입장이며, 현재 한·일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2016. 11. 9.

■ 주한일본대사, 한·일 협력해 北 ‘비핵화 목표’ 관철해야(연합뉴스)

-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62) 주한 일본대사는 한미일이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한 대북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나가미네 대사는 7일 서울 주한일본대사관에서 부임 후 국내 언론과는 처음으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규정한 뒤 “일본과 한국은 각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협력해가며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고, (대북) 압박을 제대로 가해야 한다”고 강조함.
- 나가미네 대사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일·한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함.

2016. 11. 10.

■ **日관방 “독도 문제, 예산 편성에서도 배려할 것”(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예산을 투입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0일 전함.
- 그는 일본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독도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영토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에서도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함.
- 스가 장관은 울여름 독도를 방문한 한국 의원들에게 연맹측이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한데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깊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이 연맹 대표단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도 면담을 하고 외무성 차원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강화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짐.

■ **한·일 관세당국, 불법·부정무역 단속에 협력키로(연합뉴스)**

- 관세청은 10일 일본 도쿄에서 제31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함.
- 이날 양측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물품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당국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마약금괴 밀수·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조사단속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함.
- 특히 최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향하는 국제 금괴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응책 마련을 위해 관련 정보와 적발사례를 긴밀히 공유하기로 함.

2016. 11. 11.

■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음주 가서명…‘속전속결’논란(연합뉴스)**

- 국방부는 다음 주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가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힘.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쯤 한일 간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 등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면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함.
-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외교부에서 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문 대변인은 전했으며, 국방부는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할 예정임.

■ 자민당의원, 위안부 결의안 주도 혼다의원 낙선에 “낭보” 환호(연합뉴스)

- 일본 집권 자민당의 현역 참의원 의원이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지한파 의원인 마이크 혼다 의원이 낙선하자 “낭보”라며 크게 반기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짐.
- 11일 교토(共同)통신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의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참의원 의원은 전날 열린 호소다(細田)파 모임에서 혼다 의원의 낙선에 대해 “낭보다. 정말 잘 됐다. 만세를 부르고 건배를 했다. 일본에 진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다”라고 말했고, 그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해서도 “일본이 자립하는 데 좋은 기회”라고 강조함.
- 미국 의회 내의 대표적 지한파로 꼽히는 혼다 의원은 그동안 미 하원에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H.R. 121) 채택을 주도하는 등 한인사회와 한국 관련 현안에 큰 관심을 가져왔고, 특히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사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옴.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11. 9.

■ <트럼프 당선> 중국 외교부, 美 차기 정부와 안정 관계 지속 기대(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것과 관련해 미국 차기 행정부와 안정된 관계를 지속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음.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자 “우리는 미국 대선의 최종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새 정부와 함께 중미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을 지속하도록 추진하고 양국과 전 세계인들이 행복해지도록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힘.
- 루강 대변인은 이번 미 대선 과정에서 미중 무역으로 미국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불거졌던 것에 대해선 “미국의 대선 과정은 미국의 내정이라 원래 평론하지 않는다”면서 “미중 무역관계에 분열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경제·무역관계는 반드시 상호 공통 이익이 된다”고 주장함.

2016. 11. 11.

■ **中상무부, 트럼프 당선에 미·중 경제무역 변하지 않을것(연합뉴스)**

- 중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중국과 미국의 경제무역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이는 트럼프가 대선 기간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와 관련해 폭탄 관세를 언급하는 등 중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이를 우려한 중국이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보임.
- 11일 중국 정부망 등에 따르면 선단양(沈丹陽)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양국은 광범위한 공통 이익을 갖고 있고 장기적이고 안정된 양국 경제무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이 된다”고 밝힘.

■ **中매체 “트럼프 힘없는 대통령 될것” 견제구(연합뉴스)**

-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내 장벽에 막혀 힘없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망함.
- 트럼프 당선인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 또한 대통령 취임 후 실현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봤음.
- 11일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트럼프는 약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 강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라는 제하의 사평(社評)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인맥이 한정된 데다 미국 정치권의 아웃사이더며 분열된 미국을 수습하느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으로 봤음.

나. 미·일 관계

2016. 11. 9.

■ **〈트럼프 당선〉 아베 축하 발표…“미·일은 흔들림 없는 동맹국”(연합뉴스)**

-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번에 미국 차기 대통령에 선출된 것에 마음으로부터 축하의 뜻을 표한다”고 밝힘.
- 아베 총리는 “일본·미국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 가치를 기반으로 맺어진 흔들림 없는 동맹국"이라고 강조하며, 그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손을 잡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트럼프의 당선에 확정되기에 앞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이미 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축"이라고 말함.

2016. 11. 10.

■ **야아베, 발 빠른 행보...트럼프와 통화 이달 17일 뉴욕서 회담(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하고 오는 17일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하는 쪽으로 조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아베 총리는 통화에서 "공고한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불가결한 존재"라고 강조했다고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장관이 전함.
-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미·일동맹을 평가한다"며 "미·일관계는 탁월한 파트너십이다. 이 특별한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으며, 아베 총리는 또 경제·안보를 포함한 미일 외교의 기축이 미일동맹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동맹을 강화해 나가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 **주일美사령관, 앞으로도 미일 동맹 강고...주일미군 역할 충실(연합뉴스)**

- 제리 마르티네스 주일미군사령관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주일 미군이 일본에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뜻을 표명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르티네스 사령관은 10일 일본 아미구치(山口)현 소재 미군 이와쿠니(岩國)기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의 미일 동맹에 관해 "일본에 있는 미군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강력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 그는 또 "미일 동맹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강고하게 존재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함.

2016. 11. 11.

■ **아베, 트럼프에 즉석제안 "뉴욕서 17일 시간되는데"..."나도 OK"(연합뉴스)**

- 11일 니혼게이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은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 연설을 하기 이전부터 트럼프 측과 통화할 수 있는 복수의 시간을 협의했고, 정부 관계자는 이 결과 “비교적 이른 시간에 답변을 얻었다”고 말함.
-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통화에서 트럼프에게 “이번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가는데, 도중에 17일에 뉴욕이나 그외 지역에서라도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전했으며, 이에 트럼프가 “좋은 제안”이라며 “나도 그날은 뉴욕에 있으니 회담이나 식사나 모두 좋다”고 즉답하면서 회담을 조율하게 됐다는 것임.
- 아베 총리는 전날 통화에서 트럼프로부터 “지금까지 경제정책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장기간 안정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평가를 들었다고 요미우리와 아사히신문은 전함.

■ **日여야 한목소리 트럼프 견제…日, 미군 주둔비 충분히 부담중(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으로부터 주일미군 주둔비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관해 일본 여야 정치인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음.
- 산케이(産經)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 부담해야 할 것은 확실히 부담하고 있다”고 말함.
-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주둔비 부담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이해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함.

다. 미·러 관계

2016. 11. 11.

■ **러, 트럼프·푸틴 외교정책 유사…당선 전부터 접촉 논란(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선거 기간에 러시아 정부와 접촉했다는 러시아 고위 관료의 발언이 나왔음. 트럼프 캠프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함.
-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러시아와 트럼프 팀이 선거 기간에 접촉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AP통신 등이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함.
- 라브코프는 “(선거 이전에) 의사소통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일을 선거 이후에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함.

라. 중·일 관계

2016. 11. 7.

■ 日외무성, 미쓰비시머티리얼에 강제노동 中피해자와 화해권고(연합뉴스)

- 일본 기업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전쟁 중 강제노동한 중국인 피해자와 화해하기에 앞서 일본 외무성이 미쓰비시머티리얼에 화해를 권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우과논객 사쿠라이 요시코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전쟁 중 강제 연행돼 자사의 전신인 미쓰비시광업 사업장에서 노역한 중국인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올해 6월 화해한 것과 관련해 “외무성이 미쓰비시머티리얼에 화해를 권고했다”고 밝힘.
- 그는 7일 산케이(産經)신문에 실린 기고문에서 외무성이 화해권고를 부정하고 있으나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고, 중국인 피해자들이 자국 법원에 미쓰비시머티리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심리하기로 하는 등 미쓰비시머티리얼리 화해하도록 하는 상황 변화도 있었으나 외무성의 권고는 중국 법원의 이런 결정보다 먼저 이뤄졌다며 이를 화해의 배경으로 지목했음.

마. 중·러 관계

2016. 11. 8.

■ 러中 총리회담서 경제협력 등 중점논의…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연합뉴스)

- 러시아와 중국 총리가 7일(현지시간)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21차 양국 정부 수장 회담을 열고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함.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를 방문한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와 드미트리 메데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 서쪽 스트렐나 지역의 콘스탄티노프궁에서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힘.
- 양국 총리는 회담에서 경제통상 및 투자 관계, 석유·가스·전력·원자력·운송·IT 분야 등에서의 협력, 지역 간 및 국경 지대 협력, 유라시아 지역 통합, 인적 교류, 군사기술 협력 등 다방면에 걸친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2016. 11. 9.

■ 리커창 푸틴 회동…사드 한반도 배치반대 등 美견제 논의한 듯(연합뉴스)

- 9일 환구망(環球網) 등에 따르면 러시아를 방문 중인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지난 8일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양자 고위급 접촉을 지속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이날 회동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양국의 관심사인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 등 미국의 기세를 누르기 위한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보였고,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는 등 최근 중·러 관계가 급속히 밀착된 분위기임.
- 자오퉁후이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러 관계가 가장 정상적이고 최고의 단계에 있다”면서 “이는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양자 관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른 당사국의 악화된 경제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함.

바. 일·러 관계

2016. 11. 8.

■ 아베-푸틴, 내달 日 야마구치 이어 도쿄서도 회담한다(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야마구치(山口)와 도쿄(東京)에서 두차례 정상회담을 할 방침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8일 전함.
- 당초 양국은 아베 총리의 지역구가 있는 야마구치에서 한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대규모 경제협력 방안 및 양국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었음.
- 그러나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러시아측이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자는 제안을 해 왔음. 이에 따라 양측은 내달 15일 야마구치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다음날 도쿄로 이동해 또 한차례 회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짐.
- 두차례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방영토 문제를 포함한 러일 평화조약 체결 협상 문제,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을 집중 논의할 예정임.

III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1.8	스페인서 북한인권포럼 개최...탈북민 '북 인권실상' 증언(연합뉴스)
	11.9	첫 '세계북한자유주간' 행사, 14일부터 미·영 등 7개국서 개최 (미국의소리)
		미국 내 탈북자, 트럼프에 '북 핵? 인권 문제 해결' 촉구(미국의소리)
	11.10	국제사회, 北인권문제 대응 '쟁걸음'...국내외서 잇단 행사(연합뉴스) 인권단체 종교활동 하다 정치범수용소행 北주민 많아(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북한인권 남한동향	11.9	통일부,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정책브리핑)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1.6	올해 1~10월 입국 탈북민 1천154명...11월 중순 3만명 돌파(연합뉴스)
	11.11	
대북지원	11.8	WFP, 북한 10월 배급량 올 들어 최고(미국의소리)
	11.9	유니세프, 북한서 '어린이 보건의 날' 행사 개최(미국의소리)
	11.11	러시아 정부, 북한에 수해 구호물자 운송 예정(미국의소리)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11. 8.

■ 스페인서 북한인권포럼 개최...탈북민 '북 인권실상' 증언(연합뉴스)

- 알칼라대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탈북민의 생생한 증언과 스페인 석학의 토론을 통해 한반도 상황 및 북한 인권 현실에 대한 스페인 대중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이번 포럼을 개최했으며, 이 날 포럼에서는 알폰소 오헤다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 교수 등 스페인 내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아태지역에서 북한의 상황'을 주제로 발표 토론함.
- 또 탈북작가 이지명 망명북한센터 이사장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증언했고 이 이사장은 "수천만 북한 주민을 노예로 부리며 내키는 대로 죽이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를 그대로 뒤서는 안 된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함.
- 박희권 주스페인대사는 행사 축사에서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체포, 고문, 처형, 신분 차별, 강제수용소 등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스페인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경각심을 갖게 됐으면 한다"고 밝힘.

2016. 11. 9.

■ 첫 '세계북한자유주간' 행사, 14일부터 미·영 등 7개국서 개최 (미국의소리)

- 영국에 본부를 둔 탈북자 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가 '제1회 세계북한자유주간' 행사 개최를 발표하고, 이번 행사는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등지에서 전 세계 탈북민 단체들이 연대해 동시에 열림.
- 올해 처음 열리는 세계북한자유주간 행사에서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세미나와 인권선언 발표, 벨기에 유럽의회와 캐나다 토론토시청 앞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사진전이 포함돼 있고, 한국의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 정권 규탄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행사에 동참한다고, 김 사무총장은 전함.
- 김 사무총장은 이런 행사들을 통해 탈북민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북한인권 문제의 열악성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북한 주민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알릴 것이고, 특히 전 세계 탈북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고 함.

2016. 11. 10.

■ **미국 내 탈북자, 트럼프에 ‘북 핵? 인권 문제 해결’ 촉구(미국의소리)**

- 트럼프 당선자에게 거는 미국 내 탈북자들의 기대는 한결같으며, 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과 핵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는 것과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모르고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것임.
- 미주탈북자선교단체를 운영하는 마영애 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권 탄압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지는 청원운동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참을 호소했고, 탈북 대학생 조은혜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함.
- 탈북자들은 또 미국이 더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이들이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한국의 하나원 같은 정착교육시설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으며,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함.

■ **국제사회, 北인권문제 대응 ‘쟁길’…국내외서 잇단 행사(연합뉴스)**

-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관련 행사가 잇달아 열림.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4일 서울에서 한미 간 제2차 북한인권 협의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 책임성 규명 강화, 인권개선 위한 노력 방안, 북한 주민의 외부세계 정보 접근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임.
- 우리 측에서 김용현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수석 대표로 참석할 예정임.

■ **인권단체 종교활동 하다 정치범수용소행 北주민 많아(연합뉴스)**

- 북한에서 종교활동으로 인해 정치범 수용소행(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는 민간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음.
-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해온 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6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힘.
- 이 단체가 2007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1만1천7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1.8%가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할 경우 정치범 수용소행 처벌을 받는다고 밝힘.

- 미국 국무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5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8만~12만 명에 이르는 북한 내 정치범 가운데 종교적 이유로 수감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힌 바 있음.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11. 9.

■ 통일부,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정책브리핑)

- 통일부는 11. 9.(수) 오전 10시 김형석 통일부차관 주재로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가한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 간 북한인권법 후속조치 점검 및 북한인권증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함.
-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제2차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각 부처에서 추진해 온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국내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 북한인권 증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을 나누었음.
- 또한, 최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며 김형석 차관은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금일 회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11. 6.

■ 올해 1~10월 입국 탈북민 1천154명...11월 중순 3만명 돌파(연합뉴스)

- 올해 들어 국내 입국하는 탈북민이 작년보다 20% 이상 늘어나면서 이달 중순께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이 3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 6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1천15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정도 늘었음. 10월 말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2만9천948명임.
- 통일부 관계자는 “이달 15~16일 정도에 국내 입국 탈북민 숫자가 3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2016. 11. 11.

■ **탈북 난민 3명 미국 입국…올해 들어 15명(미국의소리)**

- 미 국무부는 이날 난민입국 현황 자료를 통해, 14세 미만 어린이 1명과 14세에서 20세 사이 1명, 51세에서 64세 사이 1명 등 탈북 여성 3명이 9일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중서부 일리노이 주에 정착했다고 밝힘.
- 이로써 올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난민은 모두 15명이 됐으며,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음.
- 탈북자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매월 2-300 달러 정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음.

5. 대북지원

2016. 11. 8.

■ **WFP, 북한 10월 배급량 올 들어 최고(미국의소리)**

- 북한 당국이 지난달 주민 한 명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세계식량계획 WFP가 밝혔으며, 지난달 주민들에게 쌀과 옥수수 등 가을 작물 수확으로 곡물 확보량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는 올 들어 최대치일 뿐 아니라 300g을 분배했던 3분기에 비해 27% 가량 증가한 규모이고, 북한 당국의 배급량은 이전에도 가을 수확이 시작되기 전인 8월과 9월 급격히 감소하고 가을 추수가 진행되는 10월 이후 회복되는 추세를 보임.
- 지난 2월부터 4월, 그리고 6월부터 8월 사이에 두 나라 사이 교역은 아예 없었으며, 보통 미국의 대북 수출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민간기구의 구호 또는 자선 지원품목’은 올 들어 전혀 없음.

2016. 11. 9.

■ **유니세프, 북한서 ‘어린이 보건의 날’ 행사 개최(미국의소리)**

- 유니세프는 최근 발표한 함경북도 수해 지원 보고서에서 북한 보건성과 함께 이달 중 ‘어린이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고, 올해 초 발표한 ‘2016 대북 지원 사업계획 보고서’에서 450만 달러를 투입해 1살 미만 영유아 37만여 명과 임산부 37만2천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할 것이라고 밝힘.
- 유니세프는 이 행사에서 170만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면역강화제와 비타민 A, 구충제

- 등을 지원할 것이고, 북한 당국은 유니세프의 권고에 따라 수해 지역 진료소에 산부인과와 소아과 의사도 특별 배치했다고 유니세프는 밝힘.
- 유니세프는 또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진단하고 16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겨울옷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수재민들을 포함해 취약계층의 건강 회복에 힘쓰고 영양과 식수 위생 분야도 지원함.

2016. 11. 11.

■ **러시아 정부, 북한에 수해 구호물자 운송 예정(미국소리)**

- 러시아 비상사태부 (Emergencies Ministry of Russia)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 명령에 따라 태풍 ‘라이언록’으로 피해를 본 북한 주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낼 계획이라고 발표함.
- 발표에 따르면 식량 175t 이상, 그리고 디젤유 700t 이상이 북한에 전달되며, 북한에 들어가는 식량에는 설탕과 곡류, 그리고 깡통에 든 음식 등이 포함됨.
- 북한은 올해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한 홍수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재 북한 영사관은 러시아 정부에 구호품과 성금 지원을 요청해서 지난달에는 북한주재 러시아대사가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구호품을 전달함.